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특집] 트럼프 재당선 및 공화당의 양원 장악 : 美 규제환경의 변화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November 11, 2024

I.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미국의 시작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거의 장악하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방향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의회의 지지와 참모진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미국 법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행정부의 모든 정책은 "법규제"를 통해 실현가능하기에, 이러한 법적 틀을 통해 트럼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노선"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며, 그 중심에는 이제 국제법이 아닌 "**미국 법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미국 법규제야 말로 최대 리스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우리 기업이 적응 ·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의 공약 중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1) 미국의 현행 법규제에 따른 실현 가능성 및 (2) 신규 법규제 도입을 통한 실현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공합니다.

II. 무역정책: 고관세 부과

▣ **(트럼프의 공약)** 아래와 같은 3가지 내용으로 나뉨.

- (보편 관세) 전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 부과

- (중국산 추가관세) 중국산에 대해서만 최대 60% 관세 부과
- (상호주의 관세) 미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 부과

▣ **(현행 법규제)**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지며, 의회는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특정 요건 충족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삼권분립원칙상,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관세 부과 가능

현행 법규제	주요 내용	
미국 헌법	의회는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	**美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 부여	※ 공통점: -**'일정요건' 충족 필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심각한 달러가치의 하락, 불공정한 무역관행, 국가비상사태) - 미 양원을 공화당이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무역법(Trade Act) 제122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혹은 심각한 달러가치의 하락 발생 시**, 대통령에게 수입품에 대하여 150일간 1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무역법(Trade Act) 제301조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경제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 부여	
관세법(Tariff Act) 제338조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을 부과**하는 교역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관세 신설(최대 50%)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지난 70년 이상 사용된 바 없음)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제1702조	**美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하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신규 도입 가능 법규제)** 트럼프는 상호주의 관세 도입을 위해 "**Reciprocal Tariff Act**" 제정 공약[1]

- (배경) 1934년 美 대통령이 다른 국가로부터 관세 양보를 받는 대가로 해당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권

1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agenda47-cementing-fair-and-reciprocal-trade-with-the-trump-reciprocal-trade-act

한을 부여한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에서 유래

- 중국 관세 평균은 미국보다 341% 높고, EU의 관세 평균은 미국보다 50% 높으며, 세계 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2배를 넘음. ⇒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

- (내용) 외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국가의 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실현 가능성)** 세부 공약별로 실현 가능성은 다소 다르게 전망

- (보편 관세) 현행 법규제만으로는 도입이 쉽지 않음 **⇒ 美 의회의 신규 법률 제정** 필요
  현행 법규제 요건(국가안보 위협 등) 상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국산 추가 관세) **현행 법규제** 만으로도 가능
  - 트럼프 1기 정부 및 바이든 정부 모두 무역법(Trade Act) 제301조를 활용하여 대중국 관세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2]
  - 트럼프 2기 정부도 위와 같이 적극 관세 부과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상호주의 관세) 美 의회의 **신규 법률 제정** 필요 ⇒ Reciprocal Tariff Act 계획 발표

▶ "중국산 또는 특정국의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가 단기간 실현 가능한 전략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대한 2,00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하는 등[3], 중국기업의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에 대하여 강도높은 차단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

▶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 및 "상호주의 관세" 도입은 단기간 도입 가능성 낮음.

"모든 수입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보편 관세 및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법규제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그러한 관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美 의회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아래 사항을 고려하면 트럼프 임기 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보편관세 등의 도입은 물가 인상 및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자 및 전미소매업체협회의 반발 등이 이어짐.[4]

✓ 2019년 트럼프 집권 당시 발의된 상호주의 관세 법안은 美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 못하고 폐기됨 (다만, 2019년 집권 시기에는 공화당이 미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트럼프 2기 집권 시기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

✓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극심한 반발 및 무역 마찰 가능성

---

2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biden-tariffs/

3 https://keystonenewsroom.com/2024/10/16/cars-more-expensive-trump-tariffs/

4 https://www.rila.org/focus-areas/public-policy/retailers-congratulate-president-elect-trump-and-n 및 https://www.cnbc.com/2024/11/06/here-what-president-elect-trumps-tariff-plan-may-mean-for-your-wallet.html

III. 산업정책: IRA 및 CHIPS Act에 따른 정부지원

▣ **(트럼프의 공약)** 바이든의 대표 산업정책인 IRA 및 CHIPS Act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함.

- **(IRA)** 그린 뉴딜에 대해 사기라고 발언하며, IRA 폐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바 있음.
- **(CHIPS Act)** 동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비판하며, 관세 부과를 통해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 유치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음.

▣ **(현행 법규제)** IRA 및 CHIPS Act 등 美 의회가 법률을 통해 도입한 보조금/세액공제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규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현행 법규제	주요 내용
법률 폐기 및 개정 절차	법률안 제출 ⇒ 소관 상임위 심의 및 의결 ⇒ 전체 회의 심의 및 의결 ⇒ 하원에서 발의된 경우에는 상원으로, 상원에서 발의된 경우에는 하원으로 회부 및 의결 ⇒ 서명 및 공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상하원 각각 **2/3 재의결** 필요)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예산조정절차에 따른 기존 예산 감축 또는 다른 항목으로의 이전 등 가능 ✓ 상하원 단순 다수결로 통과 가능. 단, 1년에 한 번만 사용 가능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각종 무역 및 금융거래에 대해 제한 조치 부과 가능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대통령에게 특정 예산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해당 예산의 지출을 폐지 또는 유예 가능 ✓ 폐지: 대통령 특별 메시지 송부 ⇒ 상하원 단순 다수결로 통과 가능 ✓ 유예: 대통령 특별 메시지 송부 만으로 자동 발효 / 단, 의회가 유예 반대시 (단순 다수결), 유예 즉시 해제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행정부처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부여
재무부 행정규칙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은 담당부처의 행정규칙에 의해서 이뤄짐. IRA는 재무부가, CHIPS Act는 상무부가 각각 행정규칙을 통해서 근거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지침을 발표함.

※ 이 외에도 의회검토법, 소송중단신청의 활용 및 연방기관 인사권 등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 **(IRA 관련 실현 가능성)** 추후 IRA 관련 시나리오별 검토를 하면 아래와 같음.

- **(의회, 전면적 폐지 가능성) 매우 낮음.**
  - 대통령은 미 의회에 해당 예산의 전부를 폐지하도록 공식 요청할 가능성 있음.
  - 다만, IRA에 따른 각종 혜택에 따라 많은 프로젝트가 개시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대부분의 혜택을

美 공화당 우세 주에서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5], 美 의회의 IRA 전면 폐지 가능성은 극히 낮음.

- **(의회, 일부 폐지 또는 예산 삭감/전용 가능성) 높지 않음.**
  - 의회는 IRA 특정 조항(전기차 세액공제인 30D[6] 및 45W[7] 등 유력)에 기배정된 예산의 사용 금지, 예산액 조정, 예산 전용 등 예산 감축을 통하여 IRA상의 혜택의 일부 폐지 가능성 있음. 특히, 향후 예산 협상 또는 세출 협상 패키지에 일정 금액의 예산 삭감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 IRA 발효 이후 그간 미 의회에서 총 54번의 IRA에 따른 혜택의 일부 폐지를 위한 투표가 있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함.[8]
  - 특히 예산 조정은 1년에 1회만 가능하며, IRA에 따른 혜택의 대다수를 美 공화당 우세 주에서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혜택의 폐지 또는 예산 삭감 **가능성도 높지 않음.**

- **(대통령, 행정명령 등 권한을 활용한 IRA 유예 · 축소· 제한 가능성) 가능성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하여 IRA 내의 특정 조항(30D 및 45W가 유력)의 이행을 유예, 지연, 축소 또는 제한할 가능성 있음.
  - 구체적으로, (1)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존 행정규칙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거나, (2) 행정명령 공표를 통해 재무부 장관에게 IRA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이후 해당 검토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IRA의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 우선, 30D 관련, “핵심광물요건”, “FEOC” 및 “흑연 예외” 등과 같이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업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할 가능성 있음.
    - ✓ 특히,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제3국 투자에 따른 IRA 우회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9]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10] 추후 **IRA 우회 행위에 대한 신규 규제의 도입 여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지출거부권한 행사 가능성) 가능성 있음.**
  - IRA에 따라 해당 년도에 배정된 예산액에 대한 지출거부권한 행사 가능, 단,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
    - ✓ 의회에서 대통령의 지출거부권한 행사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출거부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이 위헌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며,[11] 동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지출거부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음.

---

5 https://www.power-technology.com/news/report-claims-that-republican-states-benefitting-most-from-ira/. 이에 따르면, IRA 시행 이후 334개의 신규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이 중 60%가 공화당 하원 지역구에서 이루어짐.

6 미국 내에서 제조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 규정

7 상업용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항

8 https://climatepower.us/research-polling/inflation-reduction-act-repeal-votes-tracker/

9 https://rhg.com/research/pole-position-chinese-ev-investments-boom-amid-growing-political-backlash/

10 https://www.energy.senate.gov/services/files/D6872313-CBC4-493F-B4B3-B91DBAF312EA

11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agenda47-using-impoundment-to-cut-waste-stop-inflation-and-crush-the-deep-state

▣ **(CHIPS Act 관련 실현 가능성)** 시나리오별 검토를 하면 아래와 같음.

- **(의회, 법률 폐지 및 예산 삭감 가능성) 매우 낮음.**
  - CHIPS Act에 의한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개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혜택을 美 공화당 우세 주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12] 美 의회의 CHIPS Act 폐지 또는 예산 삭감 가능성은 상당히 낮음.
  - 더욱이 미-중 경쟁의 핵심품목이 반도체이며, 제조업 부흥 및 미국 내 공급망 회귀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도 고려 필요

- **(대통령, 예산 집행의 제한 가능성) 발생 가능성 있음.**
  - IRA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에서는 해당 법률 또는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하여 기존 CHIPS Act에 따른 예산 집행(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 아직 법적으로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약속의 취소 가능성
  - 기체결된 보조금 지급 계약에 정부의 "편의상 계약 해지" 조건이 포함된 경우, 조기 해지 절차의 행사 가능성
  -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후 보조금 지급 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추가 요건을 부가하여 사실상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승인 절차를 지연할 가능성

Ⅳ. 경제안보정책: 제재 및 수출통제

▣ **(중국)** 바이든의 기존 정책과 유사할 가능성 있음.

- 반도체 관련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는 이미 트럼프 1기때부터 시작되었음. 이에, 중국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 정책기조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단기적으로 트럼프 1기 당시 도입한 우려기업 목록(Entity List) 등재 방식을 활용하여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민군 융합정책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기술이 군사 분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트럼프는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르는 실리주의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및 현재와 같은 첨단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통제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업계로부터 그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관련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동)** 바이든의 기존 정책과 유사할 가능성 있음. 다만, 대이란 정책의 경우 강력한 제재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음.

---

[12] https://edition.cnn.com/2024/02/14/business/manufacturing-jobs-biden/index.html

- 바이든의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 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이란에 대한 회의적 입장,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2020. 9. 15. 미국(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의 중재 하에 아랍국가들(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

-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대이란 접근 방식을 비판한 바 있는바,[13] 트럼프 재집권시 이란의 석유 수출과 국제 금융 거래를 겨냥한 엄격한 제재로의 복귀가 예상되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 기조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음.[14]

▣ **(러시아)** 바이든의 기존 정책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인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됨. 트럼프는 그간 선거 캠페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주장하였음.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 높음.
  - 다만,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
    - ✓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의 평화 제안은 푸틴의 입장과 거의 유사하며, 일부 트럼프의 참모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중국으로 외교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 ✓ 이에 반해,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 지지

Ⅴ. 결론: '돌아온' 트럼프가 가지고 올 커다란 변화 … 그 여파는 어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WTO협정과 같은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호주의적", "보호주의적",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적"인 정책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글로벌 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 기업은 이제 이 같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신속히 적응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법규제를 통해 실행 가능하며, 어떠한 모습을 띨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법규제의 도입은 이에 대응한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미국의 추가적인 법규제를 야기하는 글로벌 규제의 에스컬레이션으로 이어져 전세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질서의 질서화"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유일한 글로벌 규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은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미국의 법규제,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칠 다양한 지정학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업 전략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3 https://www.politico.com/news/2024/01/31/trump-biden-iran-defense-00138878

14 https://www.usnews.com/news/world/articles/2024-11-01/analysis-iran-braces-for-trump-victory-fearing-more-israeli-strikes-western-sanctions

각자 도생의 글로벌 질서 속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해외규제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팀은 최근 글로벌 경제 · 무역 · 안보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규제 · 정책 변화 및 각 기업의 공급망 · 비지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이용우** | 변호사 T. 02-316-4007 E. ywlee@shinkim.com
- **헬렌박**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선영** (Sunny Kim) | 외국변호사 T. 02-316-4655 E. syokim@shinkim.com
- **박효민** | 변호사 T. 02-316-4252 E. hmipark@shinkim.com
- **이상욱** | 변호사 T. 02-316-4538 E. swlee@shinkim.com
- **윤강현** | 고문 T. 02-316-4322 E. khyun@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